

남북 경제 협력 활성화 가능성 있나

김 영 윤 |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남북 경제 협력의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 현재와 같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남북 경제 협력이 활성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아닌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관계 때문일 것이다.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적대 관계를 타파하려는 의지를 남북한 어느 누구도 현 단계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없는 것은 뻔한 이치다. 따라서 남북 경제 협력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개성공단만 그저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북한을 변화시켜 우리가 원하는 형태와 내용의 통일을 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 제4조는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

책은 현재의 북한을 바꾸는 정책이다. 아니 바꾸어야만 하는 정책이다.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이념과 체제를 변화시켜야만 우리가 원하는 내용과 형태의 통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북 정책을 취하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할까? 여기에 남북 경제 협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남북 경제 협력이 자유 민주적 평화 통일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정치·군사적 측면의 통일 정책과는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할까?

核 문제가 걸림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대북 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이다. 2014년 초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화두로 통일 논의에 불을 댕기면서 ‘드레스덴 구상’까지 내놓았다. 그런데 남북 관계에는 일말의 진전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다면 그렇게 치부하고 내버려두면

특집 북한 건설시장, '통일 대박'의 마중물

되는 일일까? 그런 정책과 제안은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일이 아닐까?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신뢰 회복'과 '비핵화 진전'을 연계한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 관계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이뤄지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 방안인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은 남북 사이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과거 대북 정책의 기초였던 햇볕정책은 물론, 강경 위주의 정책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지 못한 것은 결국 남북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을 달지 않고 남북한 간 대화를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金正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래서 남북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고 핵 문제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사회 분야 및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는 다름 아닌 남북 교류 협력 프로젝트다.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전력·교통·통신 분야 인프라 구축, 개성공단의 국제화 유인, 지하자원의 공동 개발을 비롯해 남~북~러 가스관 부설과 송전망 구축 사업, 그리고 나선특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사업이다. 또한, 남북한 간 호혜적 경제 협력과 사회 문화 교류의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보건·의료 협력과 녹색경제(농업·조림·기후변화) 협력 체계화를 도모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종교 등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치적 상황과는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을 추구하고 대북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영유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이산가족 문제에서의 실질적 성과, 국군 포로와 납북자 귀환도 도모하려는 사업을 담고 있다. 대북 협력의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 간 대표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주선하는 한편, 국제 투자 유치를 지원하려고 한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는 지난 3월 독일 순방차 들른 박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 제안에서도 비슷하게 제시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구상과 제안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풀리지 않는다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선(先) 조건 충족, 후(後) 관계 개선이라는 구도가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그와 같은 원칙과 구상이 북한 존재의 불인정 내지 대북 우월적 자세를 바탕으로 있는 점이다. 북한은 곧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못살고 가난하기 때문에 남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인 문제, 즉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남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백번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정책의 상대인 북한에게는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의 존립을 담보하는 핵을 아무런 보장 없이 포기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 대박론만 하더라도 북한은 남한의 흡수 통일로 보고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북한 주민의 마음 얻을 수 있어야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남북 관계 개선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현재의 대북 정책을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이다. 정치·군사 문제를 경제 협력의 문제와 분리시켜야 한다. 오히려 경제 협력을 통해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독과 서독은 분단 이후 부단하게 이루어진 양국 간의 길고 긴밀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통일을 이루었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얻었던 대서독 경험은 통일을 하면 서독과 같이 자유롭고 잘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은 한사코 통일하려 했다. 그것도 동독이 서독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그야말로 ‘흡수되는’ 형태의 통일을 원했던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평화 통일, 동독 주민의 시민 혁명으로 쟁취한 통일이 독일 통일의 실체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통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통일이 가능하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교류와 접촉의 면을 넓혀야 한다. 북한이 영영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변해 있다. 잘 변하지 않는 부류는 북한을 다스리고 있는 위성지주들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그 곳에서 일하기 원한다. 남한 기업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고맙게 생각한다. 일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동조하는 의식을 갖는다. 이는 돈 주고도 얻기 힘든 효과다.

민간 경험 지속 가능한 장치 마련을

남북한 간의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과제가 중요하다.

첫째,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실상의 통일의 의미는 남북한이 경계를 초월하여 서로 넘나드는 상태를 말한다. 남북 간에 자본·기술·노동력이 왕래하고 누구든지 자유 방문과 관광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치·제도적인 통일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서독의 브란트 수상은 대동독 정책과 같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을 서로 다른 체제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체제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류 및 협력이 통일의 추동력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 남북한 통일을 위한 돌아가지만 가장 빠른 길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북한을 방문할 수 있고,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 여행할 수 있고, 가족을 만날 수 있으면 된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인원과 물자가 육로를 통해 오고갈 수 있으면 반드시 정치·제도적인 통일이 되지 않아도 통일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둘째, 남북 관계가 정치적·군사적인 관계로 인해 악화되어도 민간 차원의 남북 경험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악화된 경험 환경에서도 기업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투자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경 분리 또는 민관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북 정책은 비핵·개방과 남북 경험을 병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에서 남한 정부 단독의 영향력 행사는 제한적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오히려 국제 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해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이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CERIK